

민생을 살리고, 국민을 지키는 유능한 민주당!

- ① 수원과 부산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‘신속회생법’
- ② 카카오 먹통과 같은 디지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‘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’
- ③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‘납품단가연동제법’
- ④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강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‘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’

□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(제400-14차)에서 우리당 중점법안 8건 등 총 1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.

□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’과 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법’ 등 ‘신속회생법’은 서울에만 설치되었던 회생법원을 수원과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입니다. 이는 전담법원의 부족으로 인해 도산절차가 지연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, 경기남부와 경남지역 등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개인회생을 도울 것입니다.

□ ‘방송통신발전기본법’(당론법안)은 일정 요건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신속한 방송통신의 재난 복구를 돕는 법입니다. 또한 ‘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’(당론법안)은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대상으로 추가하고,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보안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와 같은 ‘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’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카카오 블랙아웃과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□ ‘납품단가연동제법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)’(당론법안)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과제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입니다. 이 법은 납품대금 연동을 위한 주요 원재료,

기준지표, 조정요건, 산식 등을 약정서에 의무 작성토록 하여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. 또한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(탈법행위)를 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 ‘납품단가연동제법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대·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.

- ‘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(국민건강보험법)’은 요양기관의 징수금 체납액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법입니다. 현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요양급여비를 상계하도록 하는 제도로 인해,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급여비만 지급되는 ‘재정누수’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법은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고 재정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.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해 불법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고,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.

- 그 외 ‘탄소중립기반조성법(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)’은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통해 탄소 중립의 기반을 조성하고, ‘청년·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(양식산업발전법)’은 청년 귀어인들의 양식산업 진입 확보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.

- 앞으로도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민생입법 처리를 통해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
2022. 12. 8.(목)


더불어민주당
정책위원회 의장 김성한

구분	법안명	주요내용
법사위 (2건)	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법	<신속회생법> -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 신설. 경기남부 및 경남 지역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 기대
	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	
과방위 (2건)	방송통신발전기본법	<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> - 데이터센터 및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 관리 대책 마련 의무화
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	
산자위 (1건)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	<납품단가연동제법(상생법)> - 납품대금의 10%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·수탁기업 간 10%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에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의무화
환노위 (1건)	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	<탄소 중립 기반조성법> -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를 통한 탄소 중립 기반조성
농해수위 (1건)	양식산업발전법	<청년·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> - 청년 귀어인들의 양식산업 진입 확보 및 지원 근거 마련
복지위 (1건)	국민건강보험법	<불법 사무장병원 퇴출 및 건강보험 재정지킴이법> - 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불법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재산압류와 신고포상금 도입. 징수금 떼먹는 의료기관에는 보험급여 지급액에서 공제